

2분기 가계·기업 신용위험 높아질 전망

국내 15개 은행 여신담당자 설문결과... 경기회복세 지연·부동산 시장 둔화 영향

국내 은행들은 2분기 가계와 기업들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회복세가 늦춰지면서 기업들의 부실 위험이 커진데다, 부동산 시장 둔화로 가계부채의 담보가치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이 평가한 올 2분기 가계와 기업의 종합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30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증가세로 지난 2012년 4분기(30) 이후 3년2분기 만에 최고치다.

신용위험지수는 국내 15개 은행의 여신업무 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지수화한 것이다. 0을 기준으로 -100~100 사이에 분포하며 지수가 높을수록 대출 위험 전망이 많을 것이고 낮으면 그 반대다.

특히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위험 악화 전망이 두드러졌다. 가계의 신용위험지수는 28로 지난 1분기(22)보다 큰 폭으로 상승해 지난 2013년 1분기(28)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고, 최근 부동산 시장 둔화와 맞물려 집값 하락 우려 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용위험도 증가세를 보였다. 대기업 신용위험지수는 지난 1분기 16에서 2분기 19로 뛰었다. 중소기업

도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증가하며 전분기 28에서 3포인트 오른 31을 기록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 둔화와 세계 주요 부진 등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은 부진한 경기회복세에 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대기업의 경우 대중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신용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일부 과다 부채기업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신용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용위험이 커지면서 은행들의 대출심사 강화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12로 전분기(-14)보다는 2포인트 올랐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다.

그중 대기업은 -16에서 -13으로 강화 전망이 다소 축소된 반면 중소기업은 -8에서 -9로 더 확대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저신용 대출을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진 영향이다.

가계 일반자금은 -3로 전분기(-9)에 비해서는 다소 축소됐으나 가계 주택자금은 -19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 시행 등으로 주택대출 심사 강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출 둔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은행의 2분기 대출수요지수는 3로 전분기(4)보다 줄었다. 2010년 3월(7) 이후 최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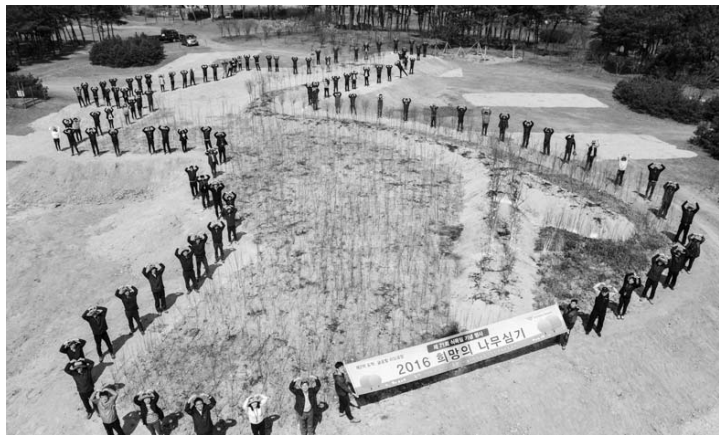
대기업의 대출수요는 전분기 6에서 2분기 3으로 다소 축소됐다.

기업 내부유보금,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로 낮은 수준의 증가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전분

기 19에서 2분기 16으로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여유 자금 확보 등으로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가계주택 대출수요는 -6으로 대출심사 강화와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31)에 비해 급격히 추락한 지난 1분기(-6) 때와 같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가계일반 자금수요(-3)도 소비 위축 등의 요인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인진수 기자



한반도 모양 무궁화동산 인천국제공항은 5일 식목일을 맞아 공영청사 대형 태극기게양대 인근에 한반도 모양 무궁화동산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은행, 11일부터 일임형 ISA 판매 돌입

은행들이 내주부터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에 돌입한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NH농협·KB하나은행 등은 지난달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일임입 허가를 받았다.

일임형 ISA는 ISA 계좌에 담을 포트폴리오의 구성과 운용을 금융사에 맡기는 상품으로 금융당국은 ISA에 한해서만 은행의 투자일임입을 허용했다.

국민·신한·우리·기업 은행은 오는 11일 일임형 ISA 상품을 출시한다.

국민은행은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10종의 모델포트폴리오(MP)를 제공한다. MP에는 공격형 2종, 적극투자형 2종, 위험중립형 3종, 안정추구형 2종, 안정형 1종 등이 포함된다.

국민은행은 자산 배분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과 절세 효과를 추구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형 ISA 상품을 내놓는다. 불안권판매를 사전에 막기 위해 안전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기별로 내부점검도 시행한다.

또 3명의 자산운용가를 영입한 것을 시작으로 자산운용 인력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형 ISA 상품을 출시한다. 기업은행은 정보기술(IT)업체인 파운트와 협업해 일임형 ISA 상품에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을 적용한다.

농협은행은 4월 중순, 하나은행은 구 외환은행과의 전산통합 작업이 완료되는 6월께 일임형 ISA 상품의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인진수 기자

한국GM "임팔라 계속해서 수입판매"에 노조 반발

한국GM이 대형 세단 임팔라를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GM 관계자는 5일 "임팔라의 국내 생산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한 결과 국내생산보다 수입판매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생산보다 제품이 가지고 있는 수입 세단의 프리미엄 가치를 원하는 소비자가 많았다"며 "또 정부의 단계별 탄소 규제에 탄력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품 포트폴리오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제임스 김 한국GM 사장은 지난 3월 2016 캠퍼바 출시 발표회에서 "임팔라의 국내 생산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GM이 임팔라의 부평공장 생산을 백지화함에 따라 노동조합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해 새로 선출된 한국GM 노조 집행부는 올해 주요 공약으로 임팔라의 부평공장 생산을 내세우기도 했다. 노조는 올해 1월부터는 임팔라 국내 생산을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지난 1월 '수입 판매되는 임팔라를 타고 다니는 임원은 어느 회사 임원인가?' 내수판매 향상의 지름길은 임팔라 국내생산' 등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2월12일부터는 '수입 세단 임팔라 차량 출입금지 경고장을 부착하기도 했다. 세르지오 호사 전임 회장은 임팔라 출시 당시 "국내 반응이 좋으면 부평공장 생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노조는 "세르지오 호사 한국GM 회장이 임팔라가 연간 1만대 이상 판매되면 국내 생산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에는 회사 측에서 연간 3만대 이상 판매'로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임팔라는 지난해 9월 출시된 후 6개월 만인 3월 중순 판매량 1만대를 달성했다.

한국GM은 "노조 측에 임팔라의 수입 판매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한 상황"이라며 "현재 노조 측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진수 기자

연매출 3억 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요구 어려워져

앞으로 연매출 3억원이 넘는 개인 신용카드 가맹점이 원가 기준으로 산정된 수수료율을 낮춰줄 것을 카드사에 요구하거나, 보상금을 받게 되면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연매출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과 법인이 모두 대형가맹점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될 대형신용카드 기준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전일(4일) 공고했다.

현재 법제처에서 막바지 심사를 거치고 있는 여신법 시행령에는 대형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준을 연매출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기준에는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법

금융위 개정안 공고, 대형가맹점으로 분류돼 법적 문제 휘말릴 수도

인 가맹점만이 대형가맹점에 속했다. 하지만 변경될 시행령과 공고된 감독규정에 의하면 연간 3억원을 넘는 매출이 있거나 과세 자료가 없는 연매출 2억2500만원을 초과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대형가맹점으로 분류된다.

연매출 3억원 이상 개인 가맹점이 대형으로 분류되면 이들이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여 달라고 요구하기가 어려워진다.

여신법 제8조의3 제4항1호는 대형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는 영세·중소 가맹점이

아니면 원가에 따라 3년마다 산정된다. 하지만 지난해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이후 연매출 3억~10억원인 가맹점 상당수는 오른 요율을 통지 받고 나서 수수료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연매출 3억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 대형가맹점이 되고 원가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율이 정당하다고 하면 이들 가맹점에서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셈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의 여신법 위반과 관련, "원가 기반의 적정 수수료율을 넘어 부당하게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의미

가 있는 부분은 리베이트 쪽이 좀 더 크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연매출 3억원 이상 가맹점들은 또 대형가맹점에 금지된 부당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즉 리베이트 단속 대상에도 포함된다. 또 연 2회 주기로 변경되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명단의 공시 대상에도 속하게 된다.

개정될 감독규정에는 또 회원이 사전에 신청을 했으면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매출 3억원 이상 가맹점이 대형으로 분류되면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리베이트 규제도 대형 가맹점에 준해 받게 되고 공시까지 해야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인진수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